

“尹 석방 검찰, 내란수괴 하수인... 존재 이유 상실”

SOCIETY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광주비상행동, 광주지검 앞에서 해체촉구 기자회견 14일까지 5·18광장서 집회... 릴레이 시국선언 예고

광주 시민단체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1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각 항고를 포기, 내란 수괴(우두머리)의 하수인을 자임하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겨울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으로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들고 있다”며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취소’에 대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상황이 이렇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관저에는 내란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의 하나인 비화본 서버가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이 핵심 증거물의 인멸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민은 반드시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검찰의 해체 요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석방 규탄 기자회견 10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비상행동은 “검찰 수뇌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며 “그 결과 다시 한번 불법 선거권이 유효되는 등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힘 있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내란 수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다시 위협에 빠뜨렸고, 국민의 인권을 파괴했다”고

까지 총동원된 내란세력의 몸부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위대한 국민은 반드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이며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그날이 오면,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전체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4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매일 개최한다.

다만 15일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일정에 따라 변동된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

면 서울 상경에 나선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현재의 선고가 미뤄지면 서울 상경당과 지역 집회를 병행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는 5·18민주광장에 대형 브라운관을 설치하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49 달맞이 15:42
☁️ 예보 18:36 달맞이 05:19



광주	☁️	4~17
목포	☁️	4~14
여수	☁️	7~12
순천	☁️	4~16
구례	☁️	3~18
광주	☁️	4~15
임도	☁️	6~15
진남	☁️	6~12
고흥	☁️	4~14
진도	☁️	5~13

목포	밀물(고)	00:05 / 12:59
	썰물(저)	05:31 / 18:21
여수	밀물(고)	07:59 / 20:07
	썰물(저)	01:23 / 14:09



10일 북구 청사 외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문인 북구청장 “검찰尹 석방은 자살골”

SNS 소신 발언... 청사 외벽에 현수막 게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문인 북구 북구청장의 소신 발언이 화제다.

10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청사 외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은 문인 북구청장 이름으로 내건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며 시장 선거에 앞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도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에 ‘검찰의 자살골...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관한 소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문 청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장교에 들어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다”며 “한마디로 ‘자살골’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심정은 착

잡했다”며 “‘법의 수호자’가 되어 할 검찰이 스스로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점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은 법적 행정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잘사니즘’을 지지하기도 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강기정 현 광주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강 시장 주 도 정치 포럼에 불참한 문 구청장은 SNS 계정에 “‘포용·통합’의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집단에서 특정한 인을 배제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예비 후보자들이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문 청장 또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동구청 홈페이지 관리 부실 ‘눈총’

잘못된 링크·정보 수두룩... 문화유산 설명도 미흡 주민·방문객 혼선...“오류 수정·모니터링 강화할”

광주 동구가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로 눈총을 사고 있다. 잘못된 링크와 정보가 수두룩해 주민과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이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인 사발령과 조직개편에 따라 홈페이지의 부서별 메뉴, 부서별 담당업무·전화번호·콘텐츠 자료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일부 페이지로 이동할 때 잘못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과거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됐다.

실제로 동구청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추천코스 ‘스마트한 시작, 환상적인 마무리’ 링크를 누르면 영어로 된 샘플 ‘블로그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월·화요일 휴무이지만, 이용정보에는 휴일·이용 요금

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담는 동구’의 무등산 전망대는 ‘작은 슈퍼마켓의 문을 열고 2층에서 느끼는 멋진 풍경을 놀라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명소’로 소개돼 있지만 현재 슈퍼마켓 대신 카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의 동구’에 소개된 전남도청 회의실의 요약본이 상세 설명과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 요약본에는 목조문화재·목조기타로, 상세 설명에는 붉은 벽돌건물로 구분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구 홈페이지의 일차·경계 지역경제 카테고리에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영업을 중지한 홈플러스 광주점점점 관련 정보가 버젓이 있었다. 홈플러스 광주점

립점은 광주의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됐다.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협력가게에 ACC부설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ACC 유료티켓 제시 5%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소개한 뒤 신청 부서로 동구청 도시재생과를 안내했지만 해당 부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사라졌다.

김제식 동구의회 의원은 “외지인, 관광객이 동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맨 처음 찾는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잘못 안내되는 내용이 많아 안타깝다.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동구는 홈페이지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각 부서가 분야별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했다”며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웃는 신사임당’ 위조지폐 구매·유통 40대 구속

수형자 지인 통해 구입... 생필품 200만원어치 절도까지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유통한 40대 남성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해 업주를 속인 혐의(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절도·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에서 지인을 통해 구매한 위조지폐 5만원권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수형자를 통해 알게 된 40대 B씨에게 지난 1월 10만원을 주고 5만 원권 위조지폐 100매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우편 등기를 통해 받은 위조지폐는 실제 25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위조지폐 속 웃고 있는 신사임당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탐미가 잡혔다.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께 한 마트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업주가 “가짜 아니냐”는 말에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A씨는 위조지폐 5만원으로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500원의 잔돈을 거슬러받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서구 풍암동 일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마수에 그쳤고, 이후 해당 마트 장교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위조지폐 24매 등을 회수했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컬러 프린터로 인쇄된 조잡한 형태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j1404@

수익원 관리비 들고 잠적

○경찰이 수익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리고 잠적한 관리사무소 직원 추적에 나서.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리 직원 40대 여성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장기 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약 7억원을 빼돌린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돌연 출근하지 않은 A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보던 중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 임정호 기자 jh4115@

100억대 전세사기범 60대 징역 9년·편취금 배상 명령

전남 광양 일대에서 100억대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60대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재판장은 사기, 부동산살상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6450만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 아파트 매입용 명의 등을 빌려준 공범 8명에게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과 800만~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무자본 검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